

제190호 (2009. 1. 19)

■ 속보/위기의 건설업

- 뉴딜 사업-원활한 민간자본 유치가 성패 좌우

■ 경제 동향

- 2008년 11월 국내 건설 수주액 전년 동월 대비 **32.9%** 감소

■ 정책·경영

-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 **2.0%**대로 하향 조정

■ 정보 마당 : 로마의 도로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

뉴딜 사업-원활한 민간자본 유치가 성패 좌우

- 현행 민자 관련 제도부터 개선해나가야, 정부 예산 증액도 반드시 필요 -

- 정부는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되 재정투자의 경우 최대한 예산을 조기 집행해 효과를 신속화할 방침임.
- 특히 국토해양부는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2009년에만 총 45조원(국고 14.8조원)을 투자해 총 79조 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5만 2,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자 계획하고 있음.
 - 10대 프로젝트에는 도로사업, 철도사업,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해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 포함돼 있으며,
 - 특히 4대강 사업에만 2009년에 총 13조 9,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9만명의 고용과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임.
- 뉴딜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임.
 -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이상의 사업들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적임.
 - 당초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방침을 변경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조달을 통해 추진하기로 선회한 경인운하의 경우와 같이 공기업이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민간자본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유치하느냐에 따라 전체 뉴딜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음.
 - 이미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향후 4년 간 25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녹색 뉴딜 사업도 7조원의 민간자본으로 진행할 계획임.
- 뉴딜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을 원활히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자 관련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민간자본 선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민자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변경, 해지시 지급금 확대, 금융

약정개선책 마련, 기술위주 평가체계 도입, 부대사업 활성화, 부의 재정지원 폐지, 품질/기능 위주의 민자 협상지침 제정 등과 관련해 꾸준히 업계의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민자 철도사업의 경우 차량구입, 유지, 환승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다시 부활할 필요성도 있음.

- 특히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침체에 대한 조기 부양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뉴딜 프로젝트 등에 포함된 시설물의 조기 준공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증대함.
 -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현재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지연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손실액을 최소화하여 재정낭비를 막을 수 있고, 뉴딜 프로젝트 등에 포함된 시설물의 조기 준공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증대함.
 - 뿐만 아니라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침체에 대한 조기 부양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정부는 SOC 예산 부족으로 공기지연이 되고 있는 SOC 시설의 적기 준공을 위해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시공’을 추진¹⁾했으나,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선투자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향후 뉴딜 사업에 대한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함.
 - 향후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 수준은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는 이에 비해 부족한 국고채 수익률 수준 이어서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 선투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수준은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차입하거나, 또는 회사채를 발행해 공사비를 조달할 때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준일 것임.
 - 또한 건설업체가 선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공보증의 역할을 담당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추가로 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이 가능하도록 보증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임.
 - 현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만으로는 향후 30대 선도 프로젝트, 녹색뉴딜 사업 등에 대한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될 때 보증잔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1) 건설부문 투자지원방안, 2008. 6. 4.

2008년 11월 국내 건설 수주액 전년 동월 대비 32.9% 감소

- 2008년 11월 민간 비주거용 건축 수주 IMF 이후 최대 감소폭 기록 -

- 2008년 11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 부문이 전년 기저 효과로 부진(전년 동월 대비 14.3% 감소)한 가운데, 민간 부문은 주택 수주의 지속적인 부진과 더불어 국내 경기 위축에 따른 비주거용 건축 수주 부진의 가세로 크게 부진(전년 동월 대비 42.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 감소한 9조 5,088억원을 기록함.

2008년 11월 건설 수주액

(단위 : 십억원, %)

구 분	합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토목	건축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8년 11월	9,508.8	4,080.5	2,325.2	1,755.3	5,428.3	1,476.3	3,952.0	3,801.5	5,707.3	4,074.3	1,633.0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32.9	-14.3	0.3	-28.2	-42.3	-18.0	-48.0	-7.7	-43.2	-37.1	-54.3
2008 1~11월	95,431.4	32,039.4	17,580.0	14,459.4	63,392.0	13,965.6	49,426.4	31,545.6	63,885.8	36,122.1	27,763.7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2.3	7.3	-2.7	22.8	-19.7	14.7	-26.0	4.3	-18.7	-28.8	-0.3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공공 부문은 토목 수주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주액을 기록한 가운데 건축 수주가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전년 동월 대비 28.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3% 감소한 4조 805억원을 기록함.
 - 공공 토목 수주는 전년 동월대비 0.3% 증가한 2조 3,252억원을 기록함.
 - 공공 건축 수주는 주택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하고 비주택 수주가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8.2% 감소한 1조 7,553억원을 기록함.
- 민간 부문은 토목 수주가 기저 효과로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비주거용 건축 수주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65.4%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42.3% 감소한 5조 4,283억원을 기록함.

- 민간 토목 수주는 지난 2007년 11월 수주액이 높는데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0% 감소하였으나, 수주액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1조 4,763억원을 기록함.
- 민간 건축 수주는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주 감소로 비주거용 건축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65.4% 감소한 6,877억원을 기록,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주거용 건축 수주 또한 침체(전년 동월비 41.9% 감소)를 지속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48.0% 감소한 3조 9,520억원을 기록함.
- 1~11월 국내 건설 수주의 누계 실적은 토목 수주가 민간 부문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나, 건축 수주가 부진(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한 95조 4,314억원을 기록함.
- 토목 수주의 1~11월 수주 누계액은 공공 부문이 전년 동기비 2.7% 감소하였으나 민간 수주가 전년 동기비 14.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31조 5,456억원을 기록함.
- 건축 수주는 주거용 건축 수주가 크게 감소(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한 가운데 비주거용 수주의 누계실적 또한 10월과 11월의 부진으로 감소세로 전환(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8.7% 감소한 63조 8,858억원을 기록함.
- 한편 2008년 11월 재건축·재개발 수주는 재개발 수주가 크게 증가(전년 동월 대비 90.2%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57.3% 증가한 2조 2,401억원을 기록함.
- 재건축 수주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6% 감소한 9억원을 기록,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주액을 기록함.
- 재개발 수주는 서울 지역의 대규모 사업 진행으로 인해 전년 동월비 90.2% 증가한 2조 2,392억원을 기록함.

11월 재건축·재개발 수주 증감률

(단위 : 전년 동기비%)

구분	재건축	재개발	총계
11월 증감률	-99.6	90.2	57.3
1~11월 증감률	3.7	-5.8	-3.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 2.0%대로 하향 조정

- 민간 소비 둔화 및 수출 침체가 주요인, 국내 경제 2010년 상반기 이후에나 회복될 듯 -

- 국내 기관들이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0%대로 감소하여 발표함.
 - 국내 기관들의 2009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2008년 11월에 발표된 GDP성장률은 3.0%대로 예측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발표된 수치들은 2.0% 내외로 발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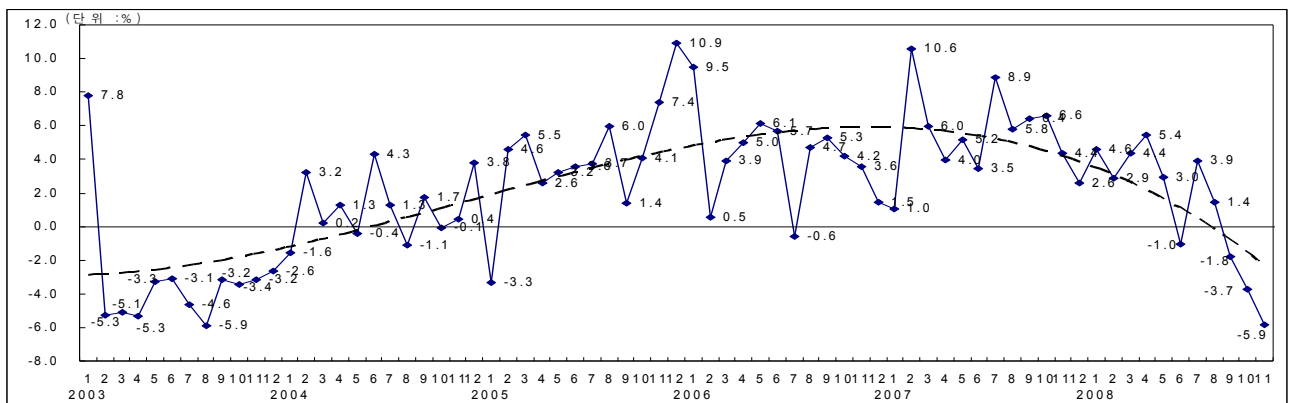
국내 주요기관의 경제 전망

구 분	K D I	삼성	현대	한경	한국은행	LG
발표 일자	11월 12일	11월 27일	12월 8일	12월 8일	12월 12일	12월 26일
GDP 성장률	3.3	3.2	3.1	2.4	2.0	1.8
민간소비 증가율	2.2	1.7	0.8	1.5	0.8	0.9
설비투자 증가율	1.9	2.3	2.3	2.6	-3.8	-5.0
건설투자 증가율	2.6	1.3	2.2	-1.8	2.6	1.5
수출 증가율	3.2	3.2	4	0.4	1.3	-7.3
수입 증가율	0.1	0	0.8	-3.4	1.1	-10.9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	3.2	3.3	2.5	3	2.3
실업률	3.6	3.5	3.5	3.5	3.4	3.7

자료 : 각 기관별 발표자료.

-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2008년 4/4분기 민간소비와 수출의 감소폭이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진 것과 함께, 설비투자 계획이 감소하는 등 침체 속도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임.
- 소비재 판매액의 경우 9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11월 침체폭이 심화됨.
 - 소비재 판매액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2008년 9월부터 3개월 연속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11월의 경우 마이너스 5.9%를 기록함.

소비재 판매액 지수(실질)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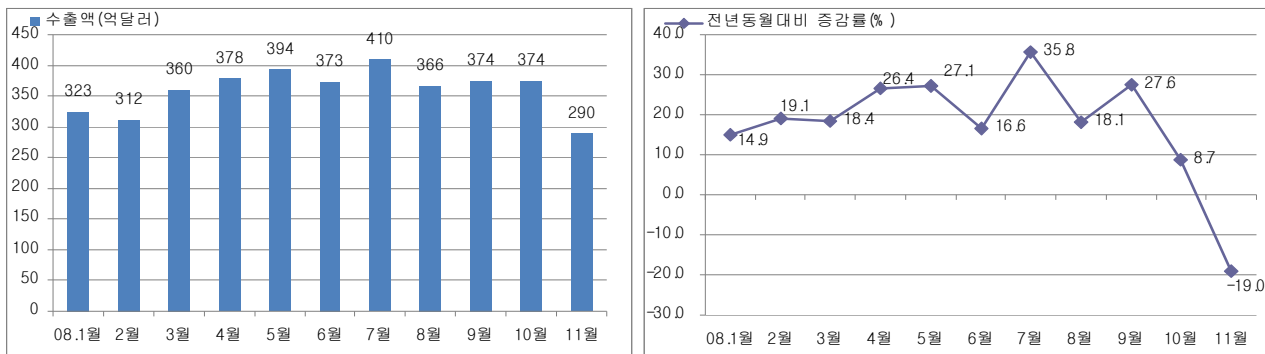


주 : 점선은 추세선임.

자료 : 통계청.

- 수출 실적, 2008년 11월 감소세로 전환(전년 동월 대비 19.0% 감소)
 - 2008년 11월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9.0% 감소,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은 200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임.
 -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중동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됨.

월별 수출 실적 추이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주 : 통관 기준임.
자료 : 관세청 월간 수출입 동향.

- 2009년 설비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감소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은행의 3,600여개 회사의 2009년 설비투자 계획 조사(08.12.11)에 의하면 2009년 민간업체의 설비투자액은 2008년 계획 물량(98조 3,000억원)보다 6.8% 감소한 91조 7,000억원으로 예상함.
 - 중소기업의 경우 31.1% 감소, 대기업의 경우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이 9.3% 감소, 비제조업의 경우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 회복 사례의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세계 경제의 추세 회복은 3~4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실물지표의 침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국내 경제의 회복 시점이 2010년 상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금융 위기 관련 경기 회복 연구 사례	내 용	예상 회복
IMF(2008. 10)	금융위기 발생 약 3분기 후 경기 하강, 7~8분기 지속	2010년 말~2011년
World Bank(2003. 10)	금융위기 발생 후 추세회복 선진국 4년, 신흥국 3년 소요	

자료 : 기획재정부, 2009년 경제운용 방향 보고회의(2008.12.16) 자료 1page 참고.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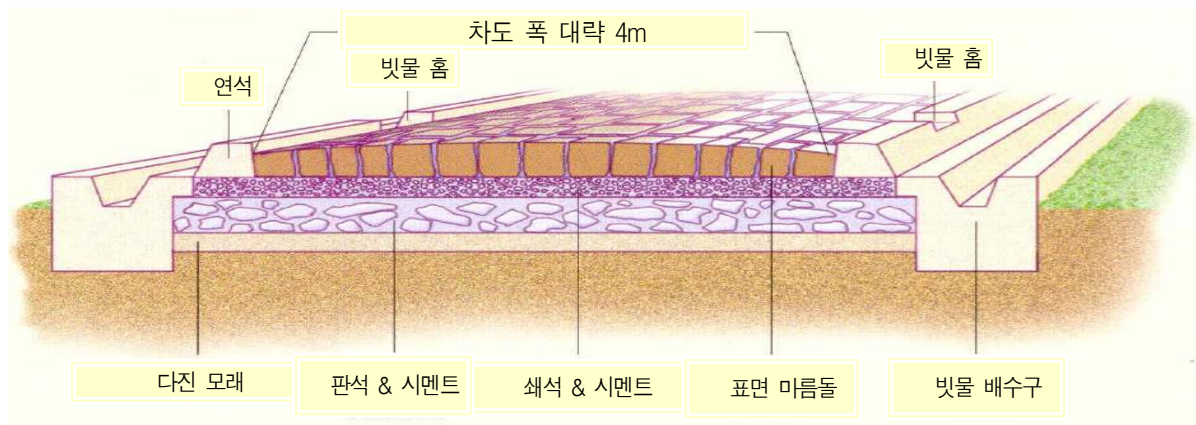
로마의 도로

■ 로마 제국의 주춧돌

- 로마는 BC 3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500년 동안 372개 노선, 8,5000km의 간선도로를 건설(지선도로까지 합하면 15만km)
 -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도로 연장 : 고속도로 3,000km를 포함해 총연장은 10.2만km
 - 2003년 현재 이탈리아 도로 연장 : 고속도로 7,000km를 포함해 총연장 48.5만km
- 로마의 도로는 제국을 군사적·경제적·문화적으로 통합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함.
 -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 여사는 로마의 국력이 신장됐기 때문에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가 확충되었기 때문에 국력이 향상됐다고 주장
 - 로마인들은 공공사업을 몰레스 네케사리에(moles necessarie)라 하여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수행할 당연한 의무로 인식
 - 황제가 건설 공사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공사를 진두지휘했을 정도로 중요시함.

■ 표준화된 규격

- 도로 규격은 지형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표준화된 규격을 가지고 있음.
 - 차도는 너비 4~4.2m이고, 기반의 깊이는 1~1.5m이며, 도로 표면은 가로·세로 70cm 정도로 자른 마름돌을 빈틈없이 메움.
 - 차도폭을 4m 정도로 한 것은 너비가 약 1.5m인 마차가 교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차도는 아치형으로 하여 빗물이 바깥으로 흐르도록 하고, 차도 양옆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 빗물 처리
 - 차도 양쪽으로 폭 3m 정도의 인도를 건설
 - 도로 옆에는 나무를 베어버림(나무 뿌리가 도로 기반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
 - 일정 구간마다 사람 키 높이 정도의 돌기둥을 세워 거리를 표시(돌기둥은 1천(milia) 걸음마다 세웠는데 이것이 마일(mile)의 기원이 됨)



로마 도로의 구조

■ 탁월한 기술력

- BC 2세기경에 건설된 플라미니우스 가도(Via Flaminia)는 아펜니노산맥을 넘는 험난한 공사 구간을 포함
 - 급류가 많은 산악 지대에서 차도와 인도를 합해 10m 너비로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난공사였을 것으로 짐작
 - 너비 6m, 길이 40m의 플루토 터널도 포함되어 있음.
- 다뉴브강에는 길이 1,135m의 트라야누스 다리와 같이 긴 다리를 건설
 - 다리는 가도의 연장선에서 건설됐고, 내구성이 강한 석조다리가 많았으며, 다리에서도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엄격히 지켜졌음.
- 로마시대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만 해서 오늘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300개가 넘는 다리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음.

■ 타산지석

- 우리나라는 외적 침입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인마가 간신히 통행할 정도로 도로를 만듦.
- 조선말 대표적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는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아쉬움을 토로
 - 길이 좁아 서로 만나면 다니기 힘들었고, 한 해를 넘기는 다리가 드물었음.
 -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여 통행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교각을 붙잡기도 함.
- 한국에서 현대적인 도로가 건설된 것은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세계은행, 1967)
 - 우리의 미흡한 인프라 축적으로 볼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양적·질적 확충 필요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 13	건설교통기술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에너지 연구단 발주처 현장 실사 참여 ▪저에너지 연구단 1~3차 연구성과에 대한 발주처의 현장 실사에 참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장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등 제시
1. 16	국회 예산정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사업의 거시경제적 영향 관련 회의 참여 ▪2009년도 SOC사업의 내용과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검토

■ 1~2월 착수 기본과제 발령 현황

과제명	주요 내용
건설경기동향 점검 및 전망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연구 과제(세미나, 이슈포커스 발간 등) ▪월단위 건설경기실사지수 조사 및 상, 하반기 전망 연구 수행
녹색건설상품의 사업성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에 부응한 건설산업의 녹색상품의 사업성 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
건설공사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건설공사의 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건설공사 보험제도의 방향성 제시 목적
중소건설업체의 사업영역 특화 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전문 중소기업체들의 사업영역별 특화 사례에 대한 조사와 시사점 도출로 중소기업체의 향후 사업영역 특화 방향성 제시

※ 2009년 9월한 완료 예정

■ 기타 연구원 활동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오는 1.21(수) 오후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프로그램 개요
 - 세미나명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 제 1주제 : 해외의 하천개발 사례 및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방향(권오현 연구위원)
 - 제 2주제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한국형 녹색뉴딜사업 추진방향(지흥기 영남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제 3주제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윤영선 기획조정실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기획팀(02-3441-0815) 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cerik.re.kr>) 참조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의 최대 관심이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에 모아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건설투자를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건설 현장의 각이성(各異性)에서 비롯된다. 거의 모든 현장이 용도, 규모, 시공 장소, 계절 등의 측면에서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외부 공간에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생산 활동의 옥외성(屋外性)이 결합된다. 따라서 건설시공 과정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이는 기계화 및 자동화에 한계를 갖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일자리의 원천인데,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둘째, 실업 문제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서 언급되는 이유는 고용유발계수가 14.8로 가장 크고 비숙련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존재함에 따라 다양한 업종과 직종으로부터 양산된 실업자들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수 진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수입유발계수가 낮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의 대책으로 유용한 이유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약 40%에 해당하는 건설생산물의 직접적인 수요자이자 발주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우려가 존재한다. 첫째, 건설투자에 대해 삽질 경제 또는 굴뚝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다. 만일 건설생산의 노동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면 이는 건설작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둘째, 건설투자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저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극심한 실업대란 상태에서는 일자리의 제공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올해부터 고용개선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건설 근로자라는 직업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건설업의 마이스터는 고용 안정과 나름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결코 저급하지 않다.

셋째,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이 많아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효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지적인데, 불법체류자의 진입만을 억제해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권탄압 문제나 내국인 숙련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도입규모를 산정해 합법적인 틀 내에서 고용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또 사업주가 합법적인 근로자만을 고용하더라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적정 노무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건설투자 금액이 원수급자에만 집중돼 정작 현장에서는 일자리 증가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일부 빌미꺼리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 제값 받아 제값 주고 제값을 투입하는 모습이 제대로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설경제, 2009. 1. 8>

심규범(연구위원·gbshim@cerik.re.kr)